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11.26.(목) 14:00 배포 2026.11.26.(목) 09:00

이용은 편리하게, 보호는 두텁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개선하겠습니다

「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 개선 간담회」 개최

- **충전잔액 한도 상향, 1일 이용한도 신설** 및 **외국인 관광객**에 대한 **새로운 본인확인 방식 도입**
- **최소 충전단위 합리화, 접근매체 양도·양수 금지, 결제 업종 제한** 등 도입

Ⅰ. 간담회 개요

금융위원회는 '26.11.26.(목) **이억원 위원장 주재**로 「**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 개선 간담회**」를 개최하였다. 이번 간담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내국인·외국인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**개선방안을 논의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- **일시/장소** : '26.11.26.(목) 14:00 / 은행회관
- **주제** :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제도 개선 논의
- **참석자**
  - **[금융위원회] 이억원 위원장**(주재), 디지털금융정책관, 디지털금융총괄과장
  - **[문화체육관광부]** 관광정책실장
  - **[법무부]** 출입국정책단장
  - **[금융감독원]** 금감원 수석부원장
  - **[유관기관]** 금융결제원장,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
  - **[선불업계]** 네이버파이낸셜, 비바리퍼블리카, 오렌지스퀘어, 카카오페이, 코나아이, 트래블월렛
  - **[관광업계]**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, 한국면세점협회

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"2007년 도입된 **선불전자지급수단**은 이제 하루 평균 1조 이상이 이용*될 만큼 **국민의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성장**했고, 특히 최근에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**외국인에게도 유용한 결제 수단**으로 활용되고 있다"고 언급하며, "그러나, 급격하게 변화한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과 달리 **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율은 아직 2008년에 머물러 있다**"고 밝혔다.

* 선불 일평균 이용 금액: ('20년) 4,676억원 → ('25년) 1조3,051억원(+179%)

이에 "기술·환경 변화에 맞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**이용 편의를 확대**하는 한편, **이용자 보호장치도 함께 강화**할 수 있도록 **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**하였다"고 밝혔다. 아울러, 동 방안이 "**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발전을 촉진**시키고, 나아가 **국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의 활력 제도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한다"고 언급했다.

Ⅱ. 「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체계 개선방안」 주요 내용

금융위원회는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**한도 체계 개선**, ② **외국인 관광객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 개선**,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**이용자 보호 및 범죄악용 방지 강화**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.

첫째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.

현행 한도 체계는 2008년 설정된 기준인 권면한도 200만원을 유지하여, 그동안의 물가 상승 및 소비 행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.

이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본인확인 방식 및 선불업자의 보안체계 등 **보완 조치를 바탕으로 충전잔액 한도를 차등적으로 상향**한다. 선불업자가 **예금계좌를 통해** 본인확인을 진행한 경우 충전잔액 한도를 **300만원**으로, **실명확인을 이행**한 경우에는 **500만원**으로 상향한다.

또한,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**1일 이용한도**(결제, 간편송금 등 포함) **규제**도 신설한다. **예금계좌를 통해** 본인확인을 진행한 경우 **600만원, 실명확인을 이행**한 경우에는 **1,000만원**으로 설정하여 이용 편의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같이 제고한다.

둘째, 외국인 관광객의 금융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도 현실화 한다.

현재도 **외국인 관광객용 선불전자지급수단**은 본인확인 시 **1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**할 수 있다. 그러나, 휴대전화 인증 등 **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**로 인해 한도 상향에 제약이 있었다.

이에 선불업자의 외국인 관광객 본인확인 방식으로 '**전자여권 확인, 여권정보·출입국정보 연계, 실시간 안면 인증**'을 통한 방법을 새롭게 도입한다. 이와 함께, 선불업자가 **외국인 여권 번호를 통해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상 고객확인의무**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
앞서 설명한 본인확인을 거쳐 발행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**충전잔액 한도는 300만원(1일 이용한도는 600만원)으로 확대**되며, 이 경우 준수해야 하는 **자금세탁 방지 보완방안***도 함께 마련되었다.

* ① 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(해외 사용 금지), ② 현금 인출 시 고객확인 재이행, ③ 이용자 간 이전·양도 금지, ④ 발행 90일 후 및 출국 후 사용 제한

아울러, **국내 장기체류 외국인**(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보유)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**오프라인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뱅킹 운영 방식을 개선**하며, 외국인 특화점포*부터 우선 실시한다.

*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말 영업, 외국어 능통직원 상주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

셋째,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,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도 강화한다.

일부 선불업자들은 '최소 충전단위'를 적용하고 있어, **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충전해야하는 불편**이 있다.

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**최소 충전단위 합리화**를 위한 **충전기준 운영원칙을 마련**하도록 권고한다.

또한, **부정사용 등을 방지**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**접근매체에 대한 양도·양수 등을 규제**하는 등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, **사행행위 등에 있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를 제한**하고, 피해 발생 시 이용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가 **피해신고 전용 채널을 24시간 운영**하도록 지도한다.

Ⅲ. 참석자 주요 발언

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"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 한도 상향이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, 특히 쇼핑·미용·의료 등 고부가가치의 영역에서 만족도 및 소비를 증진시키며 **방한 관광의 양적·실적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**한다"고 밝혔으며, **관광업계**(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, 한국면세점협회) 역시 "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상향이 **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·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**할 것"이라고 언급했다.

선불업계는 "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물가와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이번 개선방안이 **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**이 될 것"으로 기대하며, 아울러 "거래 특성에 맞는 합리적 한도 운영과 이상거래 탐지 및 부정사용 방지, 자금세탁 방지 등 **안전장치를 강화**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은 "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, **편리하고 안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본인확인 체계**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"고 말했으며, **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**은 "선불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**보안 강화**, 이용자의 **권익 제고** 및 **불법·부당 사용 방지**를 위해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Ⅳ. 향후 계획

금융위원회는 **'27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**할 계획이다. 한편, 법령 개정 전이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**혁신금융서비스(샌드박스)를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상향을 우선 추진**할 예정이다.

※ [별첨1]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
[별첨2] 「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체계 개선방안」

담당부서	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	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민규	(02-2100-2536)
< 공동 >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심민석	(044-203-2891)
		담당자	사무관	윤아람	(044-203-2894)
< 공동 >	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변재은	(02-3145-8780)
		담당자	팀 장	류한은	(02-3145-8795)
< 공동 >	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	책임자	센터장	박정현	(02-531-3100)
		담당자	팀 장	이제은	(02-531-315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